



우크라이나
전쟁
2~3면

트럼프의
김정은 러브콜
4, 5면

삼성전자 DX 노동자 투쟁 5면
카카오뱅크 파업 예고 5면

10·11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
11면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우익의 반격
12면

세계 경제를 보는
다섯 가지 키워드 6~9면

약발이 떨어진 트럼프의 김정은 러브콜도 위험할 수 있다

관련 기사 4, 5면



사진 출처: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청(DSNS)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전례 없이 늘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타는 키이우의 아파트

유럽 국가들의 주도 하에 더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원웅

올여름 한국과 서방의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부각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스크바 공습과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유례 없는 연료난이 일어나며 푸틴은 굴욕을 겪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도 거세지면 우크라이나 본토는 더 처절한 전장이 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7월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달이라고 발표했다(437명 사망,

2,610명 부상).

러시아는 올해 들어 더 많은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고 발사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는 금세 바닥나 버렸다.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이 된 우크라이나군은 몇 주 전부터 러시아 미사일 격추 현황 발표를 중단했다.

러시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전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대신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더 많이 분

담하게 된 것과 관련있다. 유럽 국가들은 핵심 무기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수 생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핵심 무기 양산은 아직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재고가 줄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드론 생산을 집중 지원했다. 올해 4월까지 드론 지원에 쓴 액수(16억 유로, 한화로 약 2.6조 원)만 해도 지난해 전체의 드론 지원 액수인 12억 유로를 훨씬 넘어섰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대적인 재무

장의 계기로 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지원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자국의 군수 생산망과 군사 기술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럽 지배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진을 빼면서 자국의 군사력도 키우려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 간 경쟁에 어떻게 비참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격화되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 자국의 재무장을 위해 복지 삭감과 군사화를 강요받는 다른 나라들의 보통 사람들이다.

전쟁에 대한 누적되는 반감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양측 교전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누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광범한 징집 거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1월 당시 신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징집 문제로 수배 상태에 있는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한탄한 바 있다.

징집관을 폭행하거나 칼로 공격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여기에는 계급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있다. 8월 18일 우크라이나의 좌파 사회학자인 볼로디미르 이슈첸코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장 노동자나 농촌 출신 등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징집됩니다.”

징집관들은 가난한 지역을 훨씬 집중 순찰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다양한 뇌물을 통해 징집을 피한다. 우크라이나를 뜨거나, 징집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거나,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등 갖가지 방식이 동원된다.

기층의 불만은 때때로 집단적으로 표현된다. 7월 초 리비우에서는 한 젊은이를 끌고가려는 징집관과 민간인 백여 명이 대치하고 징집 차량을 전복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남서부 빈니차에서는 57세의 민영 버스 기사가 징집관에 의



사진 출처: Suspline Lviv / Iryna Hrytsan

최근 우크라이나군 징집관들과 민간인들의 충돌 과정에서 전복된 징집관 차량

해 끌려간 것에 항의해 동료 기사들이 버스 운행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 또한 충원자가 전사자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징집에 대한 반발에 부딪힌 뒤, 국방부와 계

약을 맺고 복무하는 계약병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당국이 보수를 늘려도 병력 충원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국과 나토의 대리자 구실을 자처했다

다시 짚어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본지는 거의 즉시 이 전쟁이 제국주의 간 전쟁임을 강조했다.

많은 주류 언론들은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으로 조명했다. 서구의 많은 좌파들도 그런 관점을 받아들인다. 한국에서는 사회진보연대가 그런 관점을 취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사실상 지지했다.

그런 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선제 침공했다는 점을 가장 중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그것이 벌어진 맥락과 떼어 놓고 보는 것이다. 전쟁은 어떤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했듯이 정치의 연속이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이후 갈수록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충돌 지대 한복판이 돼 왔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러시아 주변 지역으로 나토를 확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푸틴 하에서 국력을 회복한 러시아는 주변국에 대한 패권을 재각인시키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왔다. 그러다 2014년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확 기울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했다. 2015년 평화 협정이 체결됐지만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나토의 협력이 심화되고, 2019~2021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의 동맹국들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서방이 득을 볼 듯하자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것이다.

미국은 이 전쟁을 이용해 그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굴욕을 만회하고 서방을 결집하고 러시아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

그래서 미국 등 서방은 전쟁 초기에 휴전이 합의될 수도 있었던 때에 이를 사보타주하고 전쟁을 장기화시켰다. 러시아에 금융 제재를 가하고 무기 지원을 통해 전쟁 수위를 관리하며 러시아의 힘을 빼 놓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의 금융 제재를 버텼고 중국과 더 가까워졌다. 그러는 동안 미국 패권의 위기는 더 깊어졌다.

그리고 전쟁 자체의 논리 때문에 서방은 갈수록 러시아 더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했다. 그리고 이는 확전의 위험을 키웠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은 오로지 서방의 지원에 의해 수행됐다. 종전은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언제까지 얼마나 힘겨루기를 지속할 것인지에 크게 달려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제는 유수의 서방 언론들조차 이 전쟁이 대리전임을 인정한다.

한편, 자민통계 등 한국의 적잖은 좌파는 미국만을 제국주의로 보면서 러시아의 전쟁을 비호한다. 그러나 러시아 또한 주변국에 패권을 재각인시키기 위해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진보적 성격도 없다. 북한의 개입 또한 (한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파병과 똑같이) 제국주의에 협력해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간 연대에서 제국주의에 맞설 대안을 찾는 것의 난점을 잘 보여 준다. 한편, 러시아 제국주의를 더 큰 악으로 보고 서방의 제국주의를 규탄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대(對)나토 협력에 침묵하는 것도 러시아 비호 좌파들이 펴는 진영론의 거울상일 뿐이다.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자국 정부의 제국주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에 기여 말라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이어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8월 23일 지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무기의 우회적 지원을 공개 촉구했다.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지원하면, 미국이 그것을 우크라이나, 중동, 유럽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양의 포탄을 미국과 폴란드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는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현재 나토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다.

2월 말 이재명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수 조달 체계(PURL)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구매할 돈을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자, 이재명 정부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화 없다”며 줄타기를 했지만 검토 방침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6월에 이재명 정부는 유럽연합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북·러 협력을 비판하고 유럽연합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천명했다. 7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 ‘방산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살상 무기 지원은 제외”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 또한 본질적으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원한 만큼의 재원을 살상 무기 확보로 돌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다’면서 실제로는 포탄과 무기를 우회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 사실이 드러나자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아예 무기 직접 지원을 공식화하려 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통해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그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또한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떠오른 무기 산업을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확보하는 중요한 매개로 삼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지정학적 압력이 더 첨예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한국 지배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우려는 단지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축적한다는 걱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북한 국가가 전쟁에서 전과를 올려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차하를 받으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 즉 남북 국가 간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따라잡히면 안 된다는 필요가 근본 문제인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 지배자들은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군사적 기여’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모든 주요 외교·안보 문제에서 점점 줄타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국의 압력이나 위성국 등 일부 ‘숨미’ 관료의 탓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자신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국가 간 경쟁이라는 동학에 따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김정은 러브 카드, 먹힐까? 누구에게?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올 가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시사하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당면하게 이뤄질 거라는 관측은 드물다.

누가 보기에든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에 끌어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으로 구긴 체면을 만회하고 자신이 세계적 위함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임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지만 말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만남을 제안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재선 선거운동 때부터 틈틈히 그랬고, 지난해 10월 경주 아펙 때도 김정은을 만나려고 안달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화 상대로서 트럼프의 매력은 떨어지고 있다.

첫째, 지난번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7년 동안 북한(조선)의 처지가 많이 달라졌다. 아시아 세력관계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점차 약화된 반면 중국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조선)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지정학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20년 동안 북한(조선)은 고립무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미관계 개선에 매달렸지만, 미국의 제재와 위협에 시달렸다. 북한(조선)은 국경을 맞댄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다. 비록 중국과 북한(조선)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중국의 부상은 여러 면에서 북한(조선)에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북한(조선)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파병까지 하면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몸값을 높이고 있다. 북한(조선)은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 중국과의 무역 증가 등으로 2023~2025년 3년 연속 3퍼센트대 경제 성장을 이뤘다(한국은행 추계).

둘째,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위상 하락과 중국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뒤집기는커녕 가속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죽을 쓰면서 미국의 패권에 한층 더 큰 상처가



대화 상대로서 트럼프의 매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났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겨루는 가장 중요한 전선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중동을 포함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문턱이 닳도록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핵 협상 와중에 이란을 군사 공격한 것은 북한(조선)의 불신을 키웠을 것이다. 물론 북한(조선)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차이가 있다. 트럼프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조선)을 군사 공격하기는 이례적 상황이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조선)은 우크라이나나 리비아 꼴이 될 수 있는 비핵화 또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대화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조선)이 매여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장담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만약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내는 ‘역 키신저’ 전략이 성공했다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화로 끌어 내기가 수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격화하고 있고, 푸틴이 북한(조선)에 3만~5만 명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러시아 특수’로 재미를 보고 있는 북한(조선)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러시아의 적국과 손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헛된 환상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측의 확실한 양보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대미 관계 개선에 매달리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려 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대화는 김정은 입장에서 그야말로 대실패, 대참사였다. 트럼프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조선)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고 자랑할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은 제재 완화도, 적대 중단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김정은은 2019년 트럼프에게 보낸 마지막 친서에서 “각하께서 해 주신 것은 무엇이며, 저는 우리가 만난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라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관

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두 번 바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처지다.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한 공허한 칭찬이나 친분 과시, 사진 촬영을 위해 다급하게 정상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더 들쭉이는 것은 이재명 정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미 대화에 기대를 표현했다. 정부 내 ‘자주파’로 분류되기도 하는 인물들이 알뜰게도 이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트럼프 지지파가 되는 모양새다.

북한(조선) 당국이 남한은 상종하지 않겠다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열어둔 탓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에 매달리는 형국이 된 셈이다. 이를 모르지 않는 트럼프는 북미대화 추진 카드를 이용해 이재명 정부에 이란 전쟁 지원 등을 압박할 테고, 실제로 청와대는 8월 17일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러브 카드의 당면 효과와 위험성을 잘 보여 준다.

게다가 설사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는 완전한 환상이다. 《폴아웃 -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의 저자인 조엘 위트는 지난 6월 말 통일부가 주최한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과 관련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고도 그런 기대를 하느냐며 “통제 불능 상태”인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사태를 관망하면서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들어야 할 촛불살인의 지적이 아닐 수

▶ 5면으로 이어짐

성과급 차별에 저항하는 삼성전자 DX 노동자들

8월 21일(금)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가 검은 옷을 입은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 4,500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반도체(DS) 노동자들은 사용자·정부·언론·법원의 총공세 속에서 상당한 성과급을 따낸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성과주의를 끝까지 완강하게 고수해 삼성전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성과급 격차가 크다.

특히 DX 부문 노동자들이 받은 성과급은 600만 원가량에 불과해 메모리 반도체 노동자들의 100분의 1 수준이다. 같은 삼성전자 직원으로서 젊음을 바쳐 힘들게 일하고 있는 DX 부문 노동자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자유발언에서 한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소외감을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집에서 딸아이가 저에게 무심하게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DS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턱 막히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DS나 DX로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안에서 편을 가르고 부문이 어디냐에 따라 서로를 비교하며 씹쓸해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부문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쏟아붓는 땀

방울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차별에 맞서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같은 회사, 같은 권리”, “경영진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올해 삼성전자가 최대 3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DX 노동자들은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영 위기라며 DX 부문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인원 감축 시도도 규탄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용자 측에게 공정한 성과 분배를 요구하는 DX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집회에서 불린 노래 가사에서 “DS, DX 싸움 붙여 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게 누구인지 잘 봐” 하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노동자 간 분열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쪽은 사용자 측이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할 때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 맞선 DX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초기업노조 등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도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동행노조는 다음 집회를 이재용의 집이 있는 한남동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정선영

본지 웹사이트에서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김영호 기자

▶ 4면에서 이어짐

없다. 조엘 위트는 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약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가 중국을 견제하며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 참모들은 북한에 대한 안보 부담을 덜고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김여정 조선로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정상 간의 관계가 “의연 훌륭하다”며 은근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트럼프에게 그 관계는 (제국주의적) 미국 국익을 위해 사용할 만지작거리는 카드일 뿐이다.

그것이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인 한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도, 아시아 평화의 지렛대도 될 수도 없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하영

5일간 전면 파업을 예고한 카카오뱅크 노동자들

카카오뱅크 노동자들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노동자들은 임금·성과급 인상, 성과급 기준의 투명화, 주식 등을 통한 장기 보상 프로그램, 공정한 평가 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영업이익 6,494억 원, 당기순이익 4,80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 대표 윤호영은 올해 상반기에만 스톡 옵션 행사 차익 등을 포함해 8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가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올랐다.

노동자들은 이런 계급 차별을 규탄하며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친기업 언론들은 IT 기업은 업무가 자동화돼 있어 파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T 기업 노동자 파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참말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IT 기업 킥스타터 노동자들은 42일간 파업해 임금 하한선 도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 임금 인상과 격려금 6,000달러(약 830만 원) 지급, 기존에 시행되던 주 32시간·4일제의 단체협약상 보호 등을 얻어 냈다.

파업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게 한다. 6월 10일 4시간 파업과 판교 행진에서도 집단행동이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친기업 언론의 보도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다.

한편 카카오 사용자 측은 21일 카카오 본사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겠다고(인적분할) 발표했다. AI 경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카카오노조는 발표 전 분할 계획을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은 100퍼센트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카카오가 다음을 AXZ로 분사할 때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수개월 만에 매각을 단행한 경험이 있다.

분할된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매각·인수합병을 맡는다. 노조는 “계열사를 … 수익률과 기업가치로만 평가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바라본다면 …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분할안이 다뤄질 12월 임시주주총회 전에 분할이 카카오와 계열사의 고용·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조직개편·매각·분사 전 사전협의와 고용안정 대책 등을 놓고 전 계열사 공동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노동자들의 닷새간 전면 파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본사 분할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올라갈 수 있다. 카카오 전체 계열사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안형우



본지 웹사이트에서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는 세계 경제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롭 호브먼**이 8월 14일 'Amir & AJ's Podcast'에서 한 강연을 옮긴 것이다.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 억만장자에게는 정말 좋을 것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 덕분에 세계 나머지 주식 시장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미국인 10퍼센트가 미국 주식의 약 9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 부유층은 나날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무역이 둔화되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던 우려를 털어 낸 듯 보입니다. 또 이란 전

쟁으로 유가와 물가가 오르고 성장 이 둔화되리라던 우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5퍼센트, 중국의 성장률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4.5퍼센트입니다. 유럽도 그보다는 더디지만 다소 성장세입니다.

그러니 부유층의 입장에서 세계 경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저는 미국과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다섯 가지로 살펴보고,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경제 불균형, (2) (특히 미국의) 정부 재정 적자, (3) 여전히 진행 중인 이란 전쟁, (4)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기후 위기, (5) 인공지능(AI)과 AI 투자 거품.



AI 투자 경쟁은 주식시장 활황과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불확실한 수익성은 거품 붕괴 위험을 키우고 있다

(1)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와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 사이의 불균형을 IMF 등이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IMF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도 지적하듯, 각국 경제는 상황에 따라 무역 흑자와 적자를 오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흑자/적자가 만성적이 되고, 그 격차가 완화되지는 커녕 계속 심해지는 듯 보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그 증가세가 다소 안정됐지만 규모 자체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변화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이전보다 적게 수입하고 —

정확히는 '중국산'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덜 수입하는 것이죠 —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품 가격을 낮추거나 덤핑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만성적이 되면 온갖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점은,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가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매워 주던 자금이 더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되죠.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에 더해, 중국의 무역 흑자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한다는 온갖 압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스스로 채택했죠.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경제 강국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값싸고 질 좋은 중국산 자동차 때문에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 중 하나죠.

중국의 무역 흑자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한다는 온갖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

(2) 정부 재정 적자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취약성의 두 번째 요인인 막대한 정부 재정 적자와 연관됩니다.

이 문제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예컨대 일본의 국가부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재화·서비스 총 생산량)의 200퍼센트가 넘습니다.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계산법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GDP의 100~120퍼센트에 이릅니다. 미국 역사상 전쟁 중이거나 극심한 경기 후퇴나 불황기를 제외하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후퇴하고 있거나 불황도 아니니, 정말이지 전례가 없는 일인 겁니다.

문제는 이토록 막대한 재정 적자를 떠받칠 돈을 조달할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 총액은 30~39조 달러이고, 이자 지급액만 1년에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이자 지급액만 자그마치 1조 달러라니, 현재 미국 군사비 총액보다 많은 것입니다(트럼프가 군사비를 50퍼센트 올리고 싶어 하니 머지않아 역전될 수도 있지만요). 국가부채를 그저 유지하는 데만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 주는 세 가지 사례를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헤지펀드들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비슷한 두 대상 사이에 미세한 가격 차이가 날 때 막대한 돈을 벌려 사들입니다. 빚을 크게 내서 투자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작은 가격 차이에서 큰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가격 차이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헤지펀드들은 매입한 자산을 처분하고 손을 털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국채를 두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헤지펀드들이 급히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채란 정부가 진 부채에 대한 채무 증서인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 국채에 붙는 이자율이 오릅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할수록 실질 이자가 더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헤지펀드들이 국채 매입을 갑작스럽게 꺼리게 되면,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금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40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국가 부채 부채 급증은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미국과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Peterson Foundation

(3) 이란 전쟁

모두 알다시피 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말고 이란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은 아직 봉쇄돼 있죠.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오가던 교역로인 호르무즈해협이 계속 봉쇄돼 있는데도 유가가 끝 간 데 없이 치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갖 미봉책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500만 배럴의 석유를 홍해의 예멘 쪽으로 돌렸습니다. 또, 중국이 수입 석유 소비를 감축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석유 비축분을 사용해 왔고, 서방도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의 상승이 비교적 억제돼 왔습니다.

유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배럴당 60달러였던 것이 80달러로, 100달러

로 올랐다가 다시 80달러가 됐습니다. 이렇듯 오르긴 했지만, 전쟁 초기에 우려하던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는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용한 비축유를 머지않아 채워 넣어야 할 테고, 중국도 동절기 대비 등의 이유로 머지않아 석유를 다시 국제 시장에서 사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가의 추가 상승 위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겠지요.

이른바 '수요 파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요 파괴'는 물가가 너무 올라 사람들이 이전 만큼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 등 온갖 면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4) 기후 위기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도 문제입니다. 영국 녹색당과 연계가 있는 경제 싱크탱크 '버든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폭염이 영국 경제에 끼친 손실이 44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냉방 부담이 커지는 것 등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것은 날씨가 더 극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가뭄이 심해지고,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심해지는 식

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뭄과 홍수 모두 식량 생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량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비료의 주재료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출되는데, 이란 전쟁 탓에 그 해협이 봉쇄돼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료의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식량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 압력은 실질적이고, 기후 위기 심화로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5) AI

현재 미국 경제를 추동하는 힘을 하나 꼽으라면 다름 아닌 AI 호황입니다. 이 보기 드문 규모의 호황은 미국 경제를 통해 세계 경제까지 추동하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가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로 들어갑니다.

이 수조 달러는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센터라는 실물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런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거의 전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것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정체하거나 심지어 침체했을 겁니다. 이는 AI 투자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에 따라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AI가 세계를 바꾸고 자본주의에 커다란 득이 된다고 낙관론자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 주장인즉슨, AI가 노동 생산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는 겁니다. 노동 생

▶ 8면으로 이어짐

재정 적자 문제의 위태로움을 보여 주는 첫째 사례입니다.

둘째, 미국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본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엔화 매입을 위해 미국 달러화가 아니라 유로화를 팔았다는 점도 이례적이지만 그런 기술적 인 부분은 넘어가죠.

왜 미국 정부가 엔화 가치를 방어한 걸까요? 엔화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일본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겪던 일본의 물가가 계속 오르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더 높은 일본 국채를 사기 위해 자금이 몰리고, 그러기 위해 미국 국채를 처분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면 엔화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 공산이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 바깥에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입니다.

즉, 미국의 엔화 방어도 미국 재정 적자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 위태로움을 잘 보여 줍니다.

셋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가 제 판에는 묘책이라고 취한 조처입니다.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조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기가 긴 만큼 이자율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여러 일이 있을 텐데, 사는 사람이 그 채권을 30년 동안 갖고 있어도 괜찮을지 걱정할 테니 말이지요. 현재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사반세기를 통틀어 최고점에 있습니다.

베선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1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 재정 적자를 벌충한다는 묘책을 써야겠다. 그 국채는 이자율이 비교적 낮을 테니 30년 만기 국채보다 부담이 적겠지.'

문제는 1년 만에 다시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년 금리가 어떨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적자로 인한 이 모든 문제는 미국 금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세계 각국 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금을 빌리는 데나 투자하는 데나 훨씬 더 부담이 커져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 7면에서 이어짐

산성이 증대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도 훨씬 많은 것들을 짓고 훨씬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그만큼 막대한 이윤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도, 바로 그 이윤이 저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것이자, 지금 주식 시장 활황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관론자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생산성 대폭 증대 → 대폭 성장 → 이윤 대폭 증대 → 만사형통.’

여기에는 다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 막대한 투자는 이윤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지 보장이 전혀 없는 채 이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기 위해 받고 있는 대출을 과연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을 얻을지 불확실한 것입니다.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너댓 개의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들의 논리는 ‘내가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자들이 대규모 투자로 나를 앞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를 추동하는 것은 냉혹한 경쟁 논리이고 최종 수익이 어떨지는 부차적인 듯합니다. 당연히도, 이런 식의 냉혹한 경쟁이 낳는 일차적 결과물은 시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과잉 생산입니다.

여기에 더해, 빅테크 기업들이 이른바 순환금융 방식으로 수익을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봅시다. 순환금융이란, 기업 A가 대출을 통해서나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기업 B에 빌려주고, 기업 B가 그 자금으로 다시 기업 A의 상품을 구입해 수익을 올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그 순환고리 안에만 머무를 뿐이고, 필요한 수익을 실제로 벌어들이기 위해 상품을 판매할 새로운 상대를 찾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기업들이 그런 생산성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만 난무할 따름이예요.

순환금융

설령 그 생산성 증대를 실제로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낳는 효과 하나는 노동력의 대폭 절감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소비가 줄어듭니다. 더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복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실업자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인종차별로 돌리려는 극우의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

재정 적자가 심해집니다.

그러니 설령 생산성이 실제로 높아진다고 해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큰 경제 성장은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일입니다. 지금의 AI 투자 열풍은 부채 상황에 필요한 생산성 증대나 수익 창출에 대한 진지한 분석보다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소망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AI는 정말 유망해. 대규모 투자가 쏟아지는 것 봐, 대박을 칠 거라잖아.’ 바로 이것이 지금의 주식 시장 활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활황은 미국의 소비 지출 면에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미국 인구의 10퍼센트가 부의 9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 그 10퍼센트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소비의 50퍼센트를 지출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인구의 90퍼센트가 소비하는 양과 인구의 10퍼센트가 소비하는 양이 비슷한 겁니다.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한눈에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그 상위 10퍼센트는 부가 늘고 있고 그와 함께 지출도 늘려 소비 측면에서 미국 경제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치면 역(逆)자산 효과가 일어납니다. 역자산 효과는 가장 부유한 10퍼센트가 더는 부유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한 소비 급감과, (수익이 실현되지 않아서 생기는) 투자 급감이 맞물리면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진짜 변화를 이룰 힘

제가 열거한 다섯 가지 외에도 취약성의 요인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 경제 위기가 반드시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위기를 모면하려면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가능성을 말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다’라고 진단하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부유층과 기업들은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다고 여깁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하에서 보내며 — 최근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고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온갖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가 부분적으로 끝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 세계 경제는 세계화된 금융에 상당히 기대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본은 수익이 나올 데라면 어디든 쫓아가고, 보통 사람들에게 먹고살 만한 임금을 주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조합 조직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임금을 낮추기 위해 시도했고,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신자유주

의 하에서 착취는 명백히 증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증권가의 흔한 표현으로 ‘조정 국면’만 있고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압도 다수의 사람들은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른바 ‘기쁨 없는 경제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최선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긴축에 대한 분노와 쓰라림은 여전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면 자녀들이 ‘내 집 마련’이나 독립을 하기가 어렵고, AI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도 갖기 어렵고, 보건의료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보며 분노와 쓰라림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었던 모든 것들, 1950~196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성장으로 제공됐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쓰라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익이 그런 쓰라림을 끌어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꽤나 교활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자들은

▶ 9면으로 이어짐

미등록 이주민 배제하는 광주특별시의 이주민 인권 조례 개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가 이주노동자 인권 조례 개악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례안이다.

통합 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해 두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조례는 “이주노동자”를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으로 정의하며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했다. 이주노동자의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반면,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배제됐다.

광주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조례를 통합하며 나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새 조례안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단기취업, 계절근로 이주노동자 등 법률상 체류 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에 국한된다.

새 조례안은 그 명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서부터 후퇴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조례안은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가 아니라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라는 용어를



메가특구는 근기법 예외, 미등록 이주민은 인권 예외 전남광주

사용한다. ‘이주노동자’는 단지 “취업을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ILO 협약 제 143호)을 의미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국적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 지역은 농축산업 사업장이 많은데, 해당 업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 조례안에서 배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취약한 처지 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2024년 광주 평동 산업단지 일대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신

분을 이용해 그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한 배달 대형 업체 관계자가 출입국 사무소 직원과 유착해 미등록 이주민 라이더들의 정보를 단속 ‘실적’을 위해 제공한 일까지 있었다.

조례안에 명시된 ‘합법’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 상태로 전락하기 쉽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계절노동제 같은 제도들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자의로 벗어나면 체류 자격을 잃는다.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처지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난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으며 단

속 추방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도 불리한 처우를 감내하곤 한다.

지난해 2월 영암에서는 돼지 농장에 고용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톨시 푼마가르 씨가 농장주와 동료의 폭행과 부당한 근로 계약 강요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그가 이러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팔로 보내 버리겠다”는 농장주의 협박 때문이었다.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나주 지게차 결박 사건 피해 이주노동자 역시 미등록 상태로 전락할 뻔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업장을 벗어나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규정상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한동안 불안에 떨며 생활해야 했다.

당시 이재명은 이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듯 말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소속 민형배가 시장인 지자체가 더 후퇴한 이주노동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합법과 불법으로 가를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통합 조례안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

김소망 전남광주 지역 노동자

▶ 8면에서 이어짐

사람들이 현 상황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극우의 인종차별 의제는 정치적 비주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파시스트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거대 기업주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경제 문제로 인해 쌓인 불만을 이민자·이주노동자·이슬람 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대중의 분노를 영동한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면, 그 분노가 현 사태에 실제로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과

체제의 수호자들을 향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지금 문 앞까지 닥친 극우 떼거지와,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종차별에 맞서자’를 건설하고, 극우 정당들인 영국개혁당과 영국회복당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세계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조직 노동계급 말입니다. 조직 노동계급은 수세에 있지만, 영원히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진정한 적에게

분노를 표출할 요인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요. ‘임금이 올라야 해. 저들이 알아서 임금을 올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파업을 하자.’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출처 Rob Hoveman, ‘World Economy’ (2026. 8. 14)
녹취·번역 김준호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시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일시 8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스페이스웨어 서울역센터 2층 토포즈홀 (서울역 1번출구)

발제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자

※ 전문통역사의 영어·통역 제공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을 재고 있는가

8월 17일 청와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으면서 “실질적 기여,”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초계함 파견 등 꽤나 구체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곧장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 기여” 방안이 무엇인지, 즉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해부대 등 이미 파견된 부대의 작전 구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도 일간지 <한국일보>는 해외 파병 등 기여 수준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쓰라린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다.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고, 트럼프는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이란 공격을 재개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기류에도 변화가 있다.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트럼프는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어느 정도 흡족함을 드러냈다. 유럽 국가들도 전쟁 초기에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공공연히 충돌하던 것에서 벗어나,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했다.

이번 전쟁의 배경에 있고 또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그간 벌여졌던 거리를 관리하는 형국이다.

난장판

그간 서유럽 정부들과 보조를 맞춰 온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는 듯하다. 이것은 그저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예컨대 한국은 여전히 많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석유 수입의 68.7퍼센트를 차지한 중동산 원유는 올해 상반기에도 6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한국 지배자들은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전선에서 북한군 장교들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뿐 아니라 적국이 해외 개입으로 위상을 쌓고 있는 상황 전반이 남한 지배자들에게는 심각한 걱정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는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미국이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과 한국, 세계 노동계급의 고통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원웅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하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요구를 더욱 높이자

이재명은 이스라엘 비판 이후 말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인종학살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이재명은 SNS에서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를 (뒤늦게) 규탄하고 5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네타냐후 체포영장의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뒤 검토 결과나 집행 방침은 공개된 것이 없다.

당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주최한 5월 23일 집회에서 김지윤 팔연사 공동간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잠시 관심을 모을지는 몰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정성은 의심받고 위선에 대한 분노도 자라날 것입니다.”

이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석 달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국교 단절이나 무기 수출 중단은커녕, 명동길·인사동길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도 계속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 해조 씨의 여권 효력도 복원되지 않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인데도 말이다.

결국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이재명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놓고 이란과 협상하는 데 활용한 외교적 수사 이상 아니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외교의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참말이 된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온 것은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과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대한 협력이다.

최근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이란 전쟁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의 “단계적 기여,” “다양한 가능성 검토”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파병이나 군사 자산 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끌면서도 정부의

표현이 점차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미국 주도의 전쟁에 기여할 방안은 계속 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 실태까지 드러났다. 최근 <참세상>의 단독 보도로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국채를 400억 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이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국채뿐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의 회사채(약 168억 원)와 주식(약 7,126억 원)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상위 보유 종목은 테바,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인데, 이들은 이스라엘군(IDF)을 적극 지원하거나 정착촌에 대출해 줘 BDS 대상인 기업들이다. 팔레스타인 BDS위원회는 이곳들을 “이스라엘 정착민 식민주의 체제의 핵심 기둥”으로 분류했다. 윤석열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한국의 공적 연금이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투자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올해 5월 세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위험을 조사하라는 제안에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졌다(<참세상> 보도). 세브론은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고 팔레스타인 천연가스를 수탈하는 기업으로 BDS 대상 기업이다. 메타는 팔레스타인 관련 콘텐츠의 검열과 삭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말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공적 기금과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돕는 이런 행태는 안팎에서 줄타기하는 이재명 중도 정부의 위선을 또다시 드러낸다.

한국 정부·기업이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커져야 한다. 10.11 가자 학살 3주기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자.

성지현

함께합시다! 가자 학살 3년 국제 공동 행동

10월 11일 행동이 낳을 세 가지 효과

10월 7일이면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학살 전쟁을 벌인 지 3년이 된다. 트럼프가 주선한 '휴전'에도 불구하고 폭격, 봉쇄와 굶주림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에서 영토를 계속 강탈하고 있다.

지난 3년은 미국 등 '집단 서방'의 위선과 '국제 사회'를 통한 해결책의 무망함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힘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식민 지배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 자신, 분노를 쌓아 가고 있는 중동의 노동자·빈민, 전 세계 곳곳에서 성장해 온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전쟁 3년을 기해 세계 각국에서 국제 공동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

이 국제 공동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독립의 세 기둥을 강화할 수 있다.

허울뿐인 '휴전'

첫째,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팔연사 집회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해 온 가자지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거듭 호소했다. "인종학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가자지구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트럼프는 허울뿐인 '휴전'을 내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 바로 그렇기에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자주 인용한 경구, "가장 혁명적인 행위는 언제나 지금 일어나는 일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한국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은 현지인들에게 전해지고 효과를 내 왔다. 팔연사 집회에 메시지를 전한 현지인들은 거듭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목소리가 그토록 멀리 있는 분들의 마음에까지 닿아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은, 이토록 힘든 시기를 건디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서안지구 라말라의 팔레스타인인이 팔연사 130차 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참패했다고 믿기를 바란다. 국제 공동 행동이 중요하다

울 집회에 보낸 편지)

팔레스타인 독립의 둘째 기둥은 이집트·요르단 등 중동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자국 정권에 맞서 들고 일어나는 혁명적 변화다.

국제 공동 행동의 성공은 이것을 고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중동에서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동 민중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지금 그 지역에서 분노가 거대한 저수지를 이루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랍 정권들은 대중의 팔레스타인 연대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면 신속하게 보안경찰에 의해 연행된다.

그러나 그런 탄압은 보통의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최근 한 미국 연구진은 아랍 8개국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들은 아랍 세계의 정치 문제를 판단할 때 가자 전쟁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이란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가자에서의 행위를 더 긴급한 위협으로 여기고,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아랍 바로미터’, 2026년 4월 6일)

더욱이 지금 중동은 수십 년 만의 큰 변화 속에 있고 그만큼 위태롭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미국 주도 질

서가 이란 전쟁으로 결정타를 입었다. 이를 대체할 다른 제국주의 '질서'가 아직 가운데 오랜 동맹이 깨지고(예컨대,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석유 카르텔 OPEC을 탈퇴했다) 지역 강국들의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정에 경제적 취약함(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AI 거품 등)까지 더해져 중동의 불안정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분노를 가둔 독이 마냥 견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성장은 그 독에 균열을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팔레스타인 독립의 셋째 기둥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장벽을 무너뜨리고 빼앗겼던 땅을 밟으며 환호하는 모습은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자들을 고무했다. "테러리즘 지지자," "유대인 혐오자" 등 온갖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에서 운동이 확대됐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자국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과 결합됐다. 특히 지난해 가을 이탈리아, 그리스 등지에서 벌어진 투쟁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항만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자국 지배자들이 추진하는 재무장과 긴축 재정에 맞서 파업을 벌인 것

이다. 오는 10월 30일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모로코, 튀르키예 등의 항만 노동자들이 또다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미국에서는 반트럼프 투쟁이 분출하는 토양을 제공하고, 영국 등지에서는 인종차별 반대를 매개로 극우 반대 운동과 결합됐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는 것의 의미는 팔레스타인 독립이라는 대의를 지지하는 세력의 지리적 범위를 넓히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에 맞서고, 자국 통치자들의 재무장과 긴축에 반대하고, 극우에 대항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정부의 탄압에 직면한 시코바스(SI Cobas)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한국 교사들의 이탈리아 파업 지지 영상을 공유하며 고무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3년 동안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론이 사회적 힘이 되려면 조율된 행동으로 모여야 한다.

10월 11일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자. 또한 자신의 캠퍼스, 노동조합, 지역 사회에서 이 행동을 알리자.

김종환

가자 학살 3년
10·11 국제 공동 행동

10월 11일(일) 오후 2시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이재명의 위기가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보좌관
사진: 김민석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지지가 급속히 떨어진 틈을 타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다소 회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이 주로 정부 정책 덕분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 주로 정부 정책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애초에 AI 거품과 반도체 활황 모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군비 경쟁이 맞물리며 일어난 일이다. 주가 급등은 정부 덕, 주가 폭락은 거품 탓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재명은 수시로 말과 정책이 바뀌는 모순에 처해 있다.

주가가 폭락하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과 청년의 이반이 가속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모순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주요 산업에선 중국이 최대 경쟁자다. 그 때문에 패권적 지위를 잃어 가는 미국과 더 밀착하려는 데, 미국도 제 코가 석 자라 관세 등 통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과 더 가까워지지 말라고 압박한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대화 운운하며 예정된 한미 간 을지프리덤스틸드 훈련을 갑자기 축소시켰다. 주된 이유는 '한국 패싱'이 아니라 이란 전쟁 실패에 따른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술책의 성격이 크다.

그러나 한미 간 실제로 여러 이견이 있고 트럼프 일당이 이재명을 불신하는 가운데, 우익은 훈련 축소를 이용해 대중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득을 보려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실용외교 같은 방침이 미국의 불신을 불러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그의 관료들은 군사독재 시기의 국가자본주의를 연상시키는

“총력전”, “전격전” 등의 용어를 꺼내 들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만들어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공항을 호남 반도체 공단 부지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탄축을 걸었다. 대중국 견제에 광주공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격전”을 얘기하는 데 반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

재벌들의 막대한 투자 약속을 받아 내려고 공을 들이면서, 정부에 대한 재벌들의 입김(착취 강화 요구 따위)은 더욱 커졌다. 메가특구에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이재명은 SK 회장 최태원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과도 곧 만난다.

한편, 최근 광주 장윤기 살인 사건은 폐 의혹에 이어 제주도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같은 경찰 부패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개혁’ 같은 사이비 개혁에 대해 대중의 실망도 쌓이고 있는 것이다.

선 넘는 극우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이재명의 대치는 (스스로 표방한 국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친기업·친미에 기울어 있다. 정부 내 무게중심도 몇 달 새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정동영이나 김영훈을 비판하는 조현·위성락·김정관의 목소리가 커졌다. 신임 당대표 김민석은 장동혁을 만나 낮뜨거운 아부 발언을 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우파의 사기가 올라가며 결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극우는 단순히 반사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잼을 던지며 카운터블로를 날릴 시기를 재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법관 제청 과

정에서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 관행을 무시한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런 조율 관행은 주류 정치권과 각 통치 기관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물을 임명해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생긴 (비민주적) 관행이다.

조희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정된 대법관 후보군 4명을 모두 교체하려는 공작도 벌였다. 그 4명 중에 청와대가 선호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희대의 도발의 문제는 권력자 간 관행 준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갈등을 공개적인 정치 쟁점으로 만든 데에 있다. 우파는 조희대가 낸 후보자들을 청와대가 거부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말만 해 온 조희대 탄핵을 감행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 입성한 극우 이진숙은 국회에서 5·18의 진실을 부정하는 공개 토론회까지 열었다. 한국판 역사 부정 행각인 이 토론회는 북한군 개입설 대신 소수의 계획된 무장폭동설을 제기했다. 무력 진압이 불가피했다며 살인마 전두환에게 정당성을 주고, 전두환 정권의 경제 성장 성과를 재평가 하자는 것이다.

1987년 이후 한국 국가가 권위주의에서 자본주의적(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은 한국 지배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항한 정당방위 저항으로 마지 못해 인정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물론 그 타협은 불완전해 발표 명령 등 진실이 아직도 다 규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 우파의 역사 ‘재평가’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머물렀었다. 가령, 주류 우파 언론인 남시욱은 저서 《한국 보수세력 연구》에서 체육관 대통령(박정희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전두환의 대통령의 선거인단) 시절을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보수의

흐결로 봤다.

이진숙은 극우 특유의 ‘5·18 성역화론’과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금기에 대한 반발을 가늠하고 말과 행동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국민이 이진숙 토론회에 대해 당의 입장이 없다고 한 것은, 아직은 금기를 대놓고 깨기 어려움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이진숙을 은근히 지원한 것이다. 이는 2019년에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자당 의원들에게 징계 시늉이라도 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진숙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부른 것이 인격 말살 의도라며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대표 김민석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김민석은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광복절에 의원단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을 대거 동원해,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음모론(중국 개입설) 농성에 힘을 실어 준 것도 극우를 고무하는 요소다.

장동혁의 이런 행보가 민주당 지지율만 올려 준다는 비웃음이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장동혁이 대놓고 난폭한 극우 시위대를 격려해도 국힘 지지율이 아니라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 왔다.

이재명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에서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을 동원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위기 탈출에 나섰지만, 중도가 추구하는 좁은 운신의 폭 속에서 이도 저도 잘 안 되면서 환멸은 커져 가고 있다. 그러자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정국 주도력과 여권 내 구심력도 약화된다.

우파가 아직 정국 주도권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초라한 위선을 비웃으며 주도권을 되찾으려 꾸준히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문성